

노동시간 연장 인정! 휴일노동수당 삭감! 교묘한 노동개악 막아내자!

국회 노동개악 시도!

11월 23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동시간 연장과 특례업종을 꿈수로 유지하고, 휴일노동수당을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가 있었다. 더민주당 소속의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합의하여 시도한 개악안이 23일 법안소위에서는 불발됐지만 28일(화)에 다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긴급 지침 발표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 지침을 내렸다. 27일(월) 각 단위별 회의를 통해 현 상황을 공유하고 긴급한 대응을 결의하기로 했다. 또한 28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긴급 대응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회 앞에서 긴급 결의대회를 연다. 현재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농성과 연동해서 매일 야간 문화제를 열고, 12월 8일(금) 국회 앞에서 다시 한 번 수도권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동개악 막고 노동법 전면개정 쟁취하자!

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려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중에서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폐기되어야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지금 노동법 개정은 커녕 교묘한 노동개악이 벌어지고 있다.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겠다면서 현행법에 명시된 주52시간 노동을 2021년까지 단계별로 유예해주고 있다. 거기에 휴일노동수당은 2배에서 1.5배로 낮춘다. 최근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면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할 때 포함해주려는 움직임까지 다양한 노동개악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의 노동개악을 피터지게 싸워서 막아냈더니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교묘한 노동개악을 마주하게 됐다. 노동자를 속이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된다. 당장 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노동 개혁법안을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한다.

〈민주노총 긴급 대응 지침〉

1/ 근기법 개악 시도 등 정세 상황에 대한 전조직적 공유 및 대응 결의 조직화

- 11.27(월)까지 각급 단위 회의를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 결의 조직화
- 각 사업장별 민주노총 긴급 정책자료 현장 게시 및 조합원 공유

2/ 11.28(화)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에 따른 긴급 대응

- 근기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할 권리 입법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
 - 일시와 장소: 11월 28일(화) 13:30,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 조직방침: 수도권 확대간부 및 조합원 참여 조직화
- 정부여당 발 노동개악 시도 강행 저지를 위한 긴급 실천 조직화: 추후 공지 예정

3/ 대국회 실천행동 참여 조직화

- 각급 단위 방침에 따른 국회 앞 농성 및 피케팅, 선전전 등 수도권 조합원 참여 조직화
- 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과 연동한 야간 문화제(17:30) 수도권 지역 조합원 참여 조직화
 - 일정: 28일(민주당사 앞) 29일(국회 앞), 30일(국회 앞) 12월 5일(국회 앞) 12월 7일(국회 앞)
- 노조할 권리 노동법 전면 개정 5대 요구 실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와 장소: 12월 8일(금) 14:00, 국회 앞
 - 조직방침: 수도권 확대간부 및 조합원 참여 조직화